
정책참고자료

2019-4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행정안전부

- 행안부, 지역 간 안전수준 격차 해소 지원한다.** _____ 4
- 2019년 지역안전지수 개선 컨설팅 대상지역 공모 실시 -

2 국민권익위원회

- 사회복무요원이 공무 중 경미한 실수로 입힌 손해는
지자체 등 소속 행정기관이 배상해야** _____ 10
- 병무청에 손해배상 주체 및 방법·절차 근거 마련 제도개선
의견표명 -

3 중소벤처기업부

-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영업계와 함께 추진상황 점검** _____ 13

4 교육부

- 올해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모두의
소재와 안전을 끝까지 확인** _____ 15
- 취학 대상 아동 소재·안전 확인 유기적 협력 체계 작동 효과 나타나 -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기정통부, 드론산업 제작-서비스기업, 대-중소
기업 간 상생협력 물꼬 튼다!** _____ 21
- 문미옥 제1차관,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

6 문화체육관광부

- 2018 국민생활체육참여율 62.2%,
전년 대비 3%포인트 증가** _____ 24
- 여성의 생활체육 참여율, 처음으로 남성보다 높아 -

7 농림축산식품부

- 청년창업농 1,600명 모집에 2,981명 지원,
3월까지 심사 후 최종 선발** _____ 30

8 환경부

미세먼지법 시행 이후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 미세먼지법 시행으로 전국 발령요건 일원화,
울산·경남·경북·강원 (영서) 사상 첫 발령 -

34

9 고용노동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크게 확대

- 적합직무를 '18년 74개 직무에서 '19년 213개 직무로 확대 -

38

10 여성가족부

강원남부지역,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강원남부해바라기센터,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신규 개소 -

42

11 국토교통부

냉·난방비 걱정 없는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298호 입주 개시

- 단독주택·아파트 장점 누리며 에너지는 60% 절감...임대료는 주변 시세 67% -

50

12 해양수산부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만드는 어촌뉴딜 300

- 해수부, 3월부터 「어촌뉴딜 300사업 자문단」 본격 가동 -

57

행안부, 지역 간 안전수준 격차 해소 지원한다.

- 2019년 지역안전지수 개선 컨설팅 대상지역 공모 실시 -

- ◇ **(충남 청양, 교통사고 분야)** 노인 사망자가 많은 지역으로 경로당 등 노인의 주 활동구역 주변 시속 30km 속도 제한 및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실시로 사망자 수 감소('16년 15명 → '17년 9명)
- ◇ **(경남 거제, 범죄 분야)**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형 범죄 감소를 위하여 근로자의 가계안정 지원, 범죄 다발지역 단속 강화 및 환경 개선(LED 로고젝터 등)을 통해 범죄 발생건수 감소('16년 2,878건 → '17년 2,632건)
- ◇ **(전남 장흥, 자살 분야)** 40, 50대 자살자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지역 행사를 활용한 자살예방 캠페인 전개, 자살 시도자 응급이송 협조체계(소방-행정-의료기관) 강화로 자살자 수 감소('16년 15명 → '17년 9명)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최근 2년간('17~'18) 2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안전지수 개선 컨설팅(국립재난안전연구원 수행)을 실시한 결과,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과 발생건수 감소 등에 일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컨설팅을 받은 지자체 담당자 대상 만족도 조사결과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만족도, △활용도, △안전역량 기여도 분야가 높게 나타났다.

< 컨설팅 자치단체 설문조사 결과(23개소 중 13개소 대상) >

설문 분야	점수	설문 내용	점수
1. 컨설팅 만족도	90.8	4. 안전역량 강화 기여도	84.6
2. 컨설팅 결과 반영 정도	75.4	5. 컨설팅으로 인한 지역 안전관리 관심도, 정책 변화 정도	75.4
3. 등급 향상 활용도	80.0		

☐ 이에 따라, 올해도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지역안전지수 개선 컨설팅」 공모를 실시한다.

* 지자체 보도 : △(울산) 지역안전지수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개선(2.12.), △(전남) 지역 안전지수 중위권 진입에 온힘(2.8.), △(대전) 지수 개선으로 안전도시 구현(1.10.) 등

☐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해당 지자체의 사망원인통계 심층 분석, 현장조사 및 3차원 공간진단 등을 통해 지역별 취약요인 및 원인을 진단·분석하고
- 이어서 지표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치단체와 함께 사망자 감축 방향 설정, 개선사업 유형 및 최적화된 세부사업 내용 등을 제시한다.
- 컨설팅의 최종 결과물은 종합보고서 형태로 제공한다.

☐ 컨설팅 대상지역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지역안전지수 개선 컨설팅 공모계획’에 따라 컨설팅을 희망하는 지자체에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단계별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 (1차) 서면 심사(3배수 이내 선정) → (2차) 대면 발표 평가

- 아울러, 오는 2월 20일(수) 14시, 정부세종2청사(17동)에서 지자체 지역안전지수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모 절차, 심사 기준 등을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 특히, 최종 선정된 자치단체 중 일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는 지역 안전지수와 주민 안전의식, 위험환경 진단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지역안전도 진단기법을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지역안전지수를 통해 주민의 안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한층 강화된 것 같다.”라며, “선정된 지역의 지수 개선 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다른 자치단체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추진배경

- 지역안전지수 공표 이후 지역 안전수준 제고를 통한 지수 개선에 대한 자치단체 의지 및 관심 지속 견인
- 통계분석, 맞춤형 개선사업 제시 등 기술적 지원을 통한 자치단체 욕구 충족 및 실질적 주민안전 확보 필요

□ 2019년 컨설팅 계획**① 주요내용**

- (지표 분석·진단) 지수 핵심지표, 사망원인통계(통계청 상세데이터), 공간진단* 등 심층 분석, 취약시간대·취약계층 추가 분석 등 진단
 - * 재난연구원, 시·도 연구원, 자치단체 합동 현장조사 등 실시
- (맞춤형 개선방안 제시) 지표 분석 결과에 따른 감축 방향 제시, 사업유형 및 최적 세부사업 내용 안내(최종 결과보고서 제공)

②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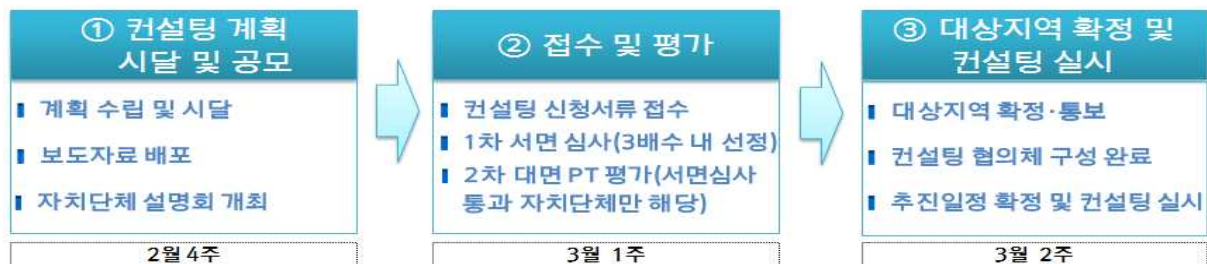
- (선정) 전국 자치단체 대상으로 컨설팅 희망 자치단체 공개 모집
 - (개소) 연구원의 컨설팅 역량, 안전지수 분야(6개), 상대평가 그룹(광역 시/도, 기초 시/군/구) 등 종합 고려(12개소 내외 예정)

- (기준) △자치단체 안전통계 확보 여부*, △협업체계 구축 현황, △사업화 가능성 등 컨설팅 효과 극대화

* 변사자 통계(지방경찰청), 119구급활동 통계(소방본부), 감염병 통계(보건소) 등

- (절차) △컨설팅 공모계획 시달(행안부 → 자치단체), △평가(서면, 대면), △대상지역 확정 및 컨설팅 실시 순으로 진행

< 자치단체 컨설팅 공모 절차 및 일정 >



- (관리) 실질적 컨설팅 성과 창출을 위한 총괄 관리

- (교육) 지역안전지수 활용법, 통계 수집·관리 기법, 유관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방안 등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수시)
- (설명회·워크숍) 자치단체별 진행상황, 우수 사례 등 공유 및 확산(분기)
- (개선방안) 지역 맞춤형, 재난약자 체감형 개선사업 등 제시(수시)

< 컨설팅 진행 전체 프로세스 및 일정 >



참고 2

지역안전지수 개선 컨설팅 신청서식

※ 신청서는 반드시 2장 이내로 작성, 붙임 자료는 10장 까지만 가능

자치단체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부서			이메일			
컨설팅 신청 분야 ※ 원하는 분야에 체크		화재	교통	감염병	자살	생활안전	범죄
통계 자료 제공 가능 여부*	구분	통계명	관할기관	협조여부 가능여부 (신청 마감일 기준)	협조기관		
	공통 통계	119구조·구급활동 정보시스템 원시자료	시도 소방본 부		제공기관 담당자	연락처	
		변사통계	지방경찰청				
	신청 분야 통계**						
	기타***						
결과 활용 가능성 ****	반영 의지	작성내용 예시) 사업비 확보 방법, 관련 규정 정비 및 지자체 장 방침(첨부 1 참조), 시도·시군구 의회의 관심도, 상위 행정기관(시도)의 지원 및 관심 여부, 기타 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작성, 증빙이 필요한 문서 및 사진 등은 붙임 자료로 제출					
	활용계획	작성내용 예시) 부단체장 주재 지수 개선 추진단 운영현황(TF, 운영현황 사진 붙임 00참조), 지역 전문가 참여 및 활용여부, 시민단체 등의 참여 및 주민 안전의식 증진을 위한 활동, 기타 등 관련 내용은 간단하게 작성, 증빙이 필요한 자료 및 사진 등은 붙임 자료로 제출					

* 최근 5년 간 통계 ('12년-'17년(필수), '18년도 자료 제공은 가점, 협조받은 통계자료는 샘플자료 붙임 필요)

** 붙임3 '공통 및 분야별 필수 제공 통계자료' 중 신청 분야별 통계를 참조하여 기입

*** 신청분야와 관련하여 붙임3 '공통 및 분야별 필수 제공 통계자료' 이외에 추가 제공이 가능한 통계 자료가 있는 경우 기입

**** 관련하여 지자체 실적이나 계획을 작성

2019. 2. .

(신청자명) 신청자명

(서명)

(지자체명) 지자체장명

(서명)

사회복무요원이 공무 중 경미한 실수로 입힌 손해는 지자체 등 소속 행정기관이 배상해야

- 병무청에 손해배상 주체 및 방법·절차 근거 마련 제도개선 의견표명 -

-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공무를 수행하던 중 경미한 실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사회복무요원을 지휘·감독하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그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게 공무를 수행하다 가벼운 실수로 개인택시에 손상을 입혀 자비로 피해를 배상한 사회복무요원에게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 A씨는 2017년 8월 쓰레기를 수거하라는 복지시설 관리자의 지시를 받고 혼자 쓰레기를 수거했다. A씨는 복지시설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던 중 쓰레기를 실은 손수레를 놓쳤고, 손수레는 경사면을 굴러가 아래쪽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개인택시 옆문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택시 옆문이 여기저기 굽히고 약 1~2cm 움푹 들어가자 택시 기사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배상할 여건이 안 되었던 A씨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

고, 택시기사가 소송까지 제기하자 A씨의 아버지는 택시기사와 250만원에 합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소속 복지시설과 관할 구청에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A씨를 대신해 손해 배상할 수 있는 예산과 근거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이에 A씨는 사회복지무요원이 공무수행 중에 경미한 실수로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 모든 책임을 떠안는 것은 억울하다며 2018년 8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병역법 등 관련규정에 사회복지무요원의 업무가 공익 목적의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각종 사회서비스 및 행정의 지원업무로, 사회복지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무요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은 복무요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사회복지무요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경미한 실수로 사인에게 피해를 입힌 이 사례에 대해 사회복지무요원을 공무원으로 보아 국가배상법 제2조를 적용,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사회복지무요원인 A씨에게 당초 배상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정당한 손해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A씨가 변상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유사민원 방지와 신속하고 명확한 권리구제를 위해 병무청장에게는 사회복지요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의 손해배상 주체 및 방법·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라며 제도개선 의견을 냈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사회복지요원 관련 민원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라며 “앞으로도 사회복지요원의 권리구제와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영업계와 함께 추진상황 점검

자영업자와 함께 만들고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18.12)의 추진상황을 자영업계와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2월 19일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자영업대책 관계부처, 주요 자영업 협·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자영업 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주재: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 (정부) 중기부(차관, 소상공인정책실장), 관계부처(기재부, 행안부, 법무부, 국토부, 고용부, 문체부, 공정위, 금융위) 실장, (BH) 일자리수석, 자영업비서관
(협·단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편의점네트워크, 한국마트협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회장단

이번 회의는 지난 1월과 2월초 개최했던 정부 차원의 자영업대책 추진 점검회의에 이어, 대책 마련에 참여했던 자영업계에 대해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회의는 자영업대책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소관부처에서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참석한 협·단체와 함께 추진상황에 대해 토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현재 자영업대책의 124개 과제 중 8개 과제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과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이 날 참석자들은 현장의 자영업자들이 정책 효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 공공기관 구내식당 의무휴무제 동반성장 평가 반영, 동반성장지수에 지역경제 활성화 실적 포함,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 지역사회 공헌도 추가, 지자체 합동평가에 소상공인·자영업 평가지표 반영,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자영업자 참여요건 완화, 고용보험 체납시 자동해지 기간 연장, 온라인 위생교육 인증절차 강화, 공무원복지포인트의 온누리상품권 지급 확대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지난 14일 ‘자영업계와의 대화’에서 제기되었던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향후 추진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각 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자영업대책의 개별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그 효과가 자영업 현장에서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자영업을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천명한 작년 12월 중장기 정책 로드맵은 자영업 현장의 목소리로 계속 살을 붙여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정부는 자영업대책 124개 정책과제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관련 협·단체와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보완해나가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모두의 소재와 안전을 끝까지 확인

- 취학 대상 아동 소재·안전 확인 유기적 협력 체계 작동 효과 나타나 -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올해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495,269명*에 대해 예비소집 단계부터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495,250명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였으며,

* 취학통지 아동수('18.12.20.기준, 읍면동→학교)와 취학학교 변경 아동수(취학통지 이후 주소이전 등)가 합산된 수치로 실제 취학대상아동수와 차이가 있음

- 아직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 19명에 대해서는 끝까지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 취학대상 아동 소재·안전 확인 현황('19.2.20 현재)]

취학통지 아동수	소재 확인			소재 확인 중
	예비소집참여	예비소집이후 소재 확인	계	
495,269명	465,769명 (94.044%)	29,481명	495,250명 (99.996%)	19명 (0.004%)

- 단위학교에서는 연초 예비소집*을 시작으로 취학대상 아동에 대하여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 왔으며,

-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학교방문요청(유선통화 등)을 통한 면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출입국 사실

확인, 읍·면·동사무소와 협력하여 가정방문 등을 실시하였고,

- 학교 차원에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대상 아동의 소재 수사를 의뢰하였다.

□ 경찰청은 전국 경찰관서(255개) 소속 여성청소년수사팀(3,382명), 학대 예방경찰관(543명) 등을 총동원하여 관할 학교장이 수사 의뢰한 예비 소집 불참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 현재 소재 수사 중인 아동들은 대부분 해외에 체류 중인 아동들(14명, 74%)로 이들의 안전 확인을 위해 외교부를 경유하여 현지 경찰을 통해 소재 수사를 촉탁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이재영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경찰청은 교육부와 협력하여 예비소집에 불참한 소재 미확인 아동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실종에 준하여 계속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 소재·안전 확인 사례]

- (허위 출생신고) 전남 A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쌍둥이 2명에 대한 소재수사 결과, 불법 체류자 자녀들의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허위 출생 신고한 사건으로 피의자 검거
- (국제 공조수사) 경북 B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아동의 경우, 연고지 추적 수사로 친부 연락처를 알아내고,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 재외국민 사실을 확인, 영상통화·근황 사진으로 아동 안전 확인 후 교육청으로부터 중국 학교장 명의 재학증명서를 회신 받아 최종적으로 아동 소재를 확인

□ 교육부는 2016년 10월에 미취학 아동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 주요내용 : 출석독촉 조치 절차 명확화,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설치, 교육청
취학관리 전담기구 설치 등 미취학·무단결석 관리 강화, 학교·교육청에 주민
등록정보 및 출입국 사실 확인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권한 부여 등

○ 이에 따라 2017년 예비소집 단계부터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청·경찰청·지역사회가 유기적
으로 연계·협력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왔으며,

○ 작년 10월 추가 개정*으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 주요내용 : (기존) 학교장 등이 가정방문 등을 위하여 기관 간 협조요청 가능
→ (개정) 요청받은 기관은 적극 협조 의무 추가

[취학대상·미취학·무단결석 아동 관리 체계]				
예비소집	입학식 이후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권고 (2차예비소집, 유선연락, 가정방문 등)	① 1일~2일 (학교+읍·면·동)	② 3일 이후 (학교+읍·면·동+교육장)	④ 7~10일 이후 (시도교육청 전담기구)	
	유선연락 등 출석 독촉, 주민등록·출입국사실 확인	가정방문, 내교조치·면담 등 출석 독촉	월1회 이상 출석 독려, 안전·소재확인 등 지속관리	
	※ 소재·안전 미확인 또는 아동학대 의심 시는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			

□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업무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취학
대상 아동에 대하여 소재와 안전 확인에 최선을 다한 학교 현장과
관계기관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 “앞으로도 관계 부처, 지역 사회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안전을 철저하게 확인해 아동의 학습권 보장과 학대 예방을 위해 더욱 촘촘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취학대상아동 소재·안전 확인 현황

2.취학대상아동 연도별 예비소집 및 소재·안전 확인 현황

참고1

취학대상아동 연도별 예비소집 및 소재·안전 확인 현황

기준일	취학대상 아동수*	소재 확인			소재 확인 중	현재 수사 중
		예비소집참여	예비소집이후 소재 확인	계		
2017.2.21	482,553명	448,622명 (92.97%)	33,833명	482,455명	98명	2
2018.2.21	484,224명	446,782명 (92.23%)	37,432명	484,214명	9명	0
2019.2.20	495,269명	465,769명 (94.04%)	29,481명	495,250명	19명	-

* 취학통지 아동수('18.12.20.기준, 읍면동→학교)와 취학학교 변경 아동수(취학통지 이후 주소이전 등)가 합산된 수치로 실제 취학대상아동수와 차이가 있음

참고2

취학대상아동 소재·안전 확인 사례

1. 취학대상 아동이 태어나지 않은 쌍둥이 형제(경찰청)

전남 A초등학교는 읍사무소로부터 통보받은 2019학년도 취학대상아동을 대상으로 올해 1월 3일에 예비소집을 실시하였다. 예비소집에 불참한 쌍둥이 형제 2명에 대하여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읍사무소와 교육청에 예비소집 결과를 통보하고 협력을 요청하였다.

보호자 및 취학대상아동을 만나기 위해 학교 담당자의 1차 가정방문과 학교의 동행 요청으로 읍사무소 담당자와 지구대 경찰 2명이 학교 담당자와 함께 합동으로 2차 가정방문까지 실시하였으나 보호자와 대상아동을 만나지 못하였다. 이후 교육지원청과 읍사무소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전방위적 소재·안전 확인 파악에 나섰다.

결국 경찰서에서 친모를 검거하여 수사 결과 예비소집 불참한 쌍둥이 형제(2명)는 허위로 출생 신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례는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전남 영암서>

2. 해외 출국 후 소재·안전 여부가 확인된 아동(경찰청)

1) 가족 모두 중국으로 출국한 사례

경북 B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아동의 경우, 여청수사팀과 해당학교가 협업하여 친부의 최종 거주지에 방문하였고, 차적 조회 및 통신수사 의뢰 등 연고지 추적수사를 통해 친부의 고모와 연락하여 친부의 연락처를 확인하였다.

외교부를 통해 재외국민 사실조회, 출입국현황을 조회하였으며, 교육청을 통해 아동의 재학관련 증명서류를 회신 받았고, 영상통화를 실시하여 해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였다.

이 사례는 부모가 중국으로 출국하여 국내 연고자가 전혀 없는 등 소재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대예방전담경찰관이 중심이 되어 여성청소년 수사팀, 해당 학교, 외교부 등 타 기관과 협업하여 소재가 확인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경북 경산서>

2) 대상아동이 필리핀에서 외조모와 거주한 사례

경기 C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아동의 경우, 대상 아동 이모(필리핀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였지만 한국어를 하지 못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을 취득 후 경찰이 된 다문화치안센터 소속 경찰관이 이모와 통화하여 대상 아동 친모(국내 거주 중)와 통화할 수 있었다. 확인 결과, 아동이 필리핀에서 외조모와 생활 중이고, 필리핀 대사관에 출생 신고(필리핀 국적 취득) 후 필리핀으로 출국한 사실과 현재 현지 유치원에 재원 중임을 확인하였다. <경기남부 안산상록서>

과기정통부, 드론산업 제작-서비스기업,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물꼬 튼다!

- 문미옥 제1차관,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 문미옥 제1차관은 2월 13일(수) 오후, 무인항공기 전문기업 성우엔지니어링(충북 청주)*에 방문하여 연구개발(R&D) 현장을 둘러보고, 드론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기업개요) '93년 설립, '18년 매출액 약 95억원을 기록한 국내 주요 중소기업

- 이번 행사는 지난달 기술력을 갖춘 국내 강소기업이 다수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2019 드론쇼코리아'를 방문하여 무인기(드론) 분야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성과를 점검한 이후,
 - 보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작기업과 서비스기업 등 다양한 산업주체들과 함께 국내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간담회에는 SKT,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등 대기업과 유콘시스템, 성우엔지니어링, 두시텍 등 중소기업,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하였다.

- 먼저, '과기정통부 드론정책 추진현황' 발표를 통해 올해 드론을 포함한 무인이동체 분야 원천기술개발을 위한 2,750억원 규모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과 함께, 빅데이터, 5세대(5G) 이동통신, 인공지능 기술과 드론과의 접목 등을 통해 활용서비스시장 육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 이어, SKT 최낙훈 상무가 '통신망을 활용한 드론 서비스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를 바탕으로, 참석자들은 국내 기업의 기술력 확보방안과 기업 간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공공수요 중심의 현재 국내 드론시장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민간차원의 서비스 활성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 문미옥 제1차관은 “국내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작기업과 서비스기업 등 주요 산업주체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 역량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 정부도 미래시장을 선도할 원천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바탕으로 5G 기반 드론 활용서비스 발굴을 적극 지원하고, 민간의 혁신적인 시도가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간담회 주요 참석자 명단(안)

구분		소속	직책	성명	비고
산업계	대기업	SKT	상무	최낙훈	실시간 영상송수신 기반 서비스
		두산모빌리티 이노베이션	대표	이두순	수소연료전지 드론
	중소기업	성우엔지니어링	대표	김성남	무인항공기 연구개발 전반
		유콘시스템	대표	송재근	무인기 시스템 전문
		두시텍	대표	정진호	무인비행 솔루션
		네스앤티	대표	이기성	다목적 군사용 드론
		유맥에어	이사	최종관	고속기동, 방송 송수신 드론
		쓰리에스테크	본부장	이준화	기상관측 드론
		하이리움산업	고문	최향철	드론용 액화수소 동력원
		에이디이	대표	김용규	안티드론 장비
유관기관	한국연구재단		본부장	박병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단장	강왕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안재영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문미옥	
			기초원천 연구정책관	고서곤	
			원천기술과장	김민표	

2018 국민생활체육참여율 62.2%, 전년 대비 3%포인트 증가

- 여성의 생활체육 참여율, 처음으로 남성보다 높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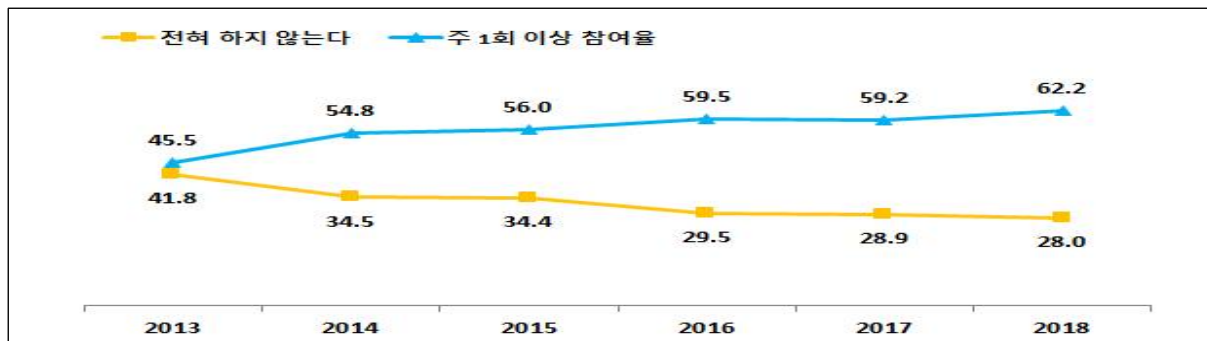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전국 17개 시도 만 10세 이상 국민 9,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결과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직무대행 김향자)과 함께 발표했다. ‘국민생활체육참여 실태조사’는 국민의 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생활체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조사이다.

2018년도 생활체육 참여율*은 62.2%로 2017년 59.2% 대비 3.0%포인트(p) 증가했다. 특히 2013년도와 대비해 약 16.7%포인트(p)가 증가했는데, 생활체육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비율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확대와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접근성 향상으로 국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이루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 생활체육 참여율: 주 1회 이상,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규칙적 생활체육 참여한 비율

<최근 5년 간 생활체육 참여율>

(대상: 응답자 전체, 단위: %)



여성 생활체육 참여율 처음으로 남성 추월, 70대 전체 참여율 전년 대비 5.2%포인트 증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주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62.8%)이 남성(61.6%)을 추월했다. 특히 40대와 50대 여성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전년 대비 각각 7.2%포인트(p), 8.6%포인트(p) 상승해 남성 40~50대 참여율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여성 70대의 생활체육 참여율도 작년보다 7.4%포인트(p) 상승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생활체육 참여율이 증가했는데, 특히 40대(65.7%)와 70세 이상(59.8%)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작년 대비 각각 5.3%포인트(p), 5.2%포인트(p) 증가했다.

<성별&연령별 체육활동 참여율 및 참여 빈도>

(대상: 전체, 단위: %, %p)

구분	전혀 안 함	한 달 3번 이하	주 1회	주 2회	주 3회	주 4회	주 5회	주 6회	주 7회	주 1회 이상		차이(%p)
										' 17년	' 18년	
전체	28.0	9.8	9.8	11.8	18.2	7.3	8.1	2.4	4.6	59.2	62.2	3.0
남 10대	26.6	11.8	15.7	10.4	14.3	5.3	11.0	2.2	2.6	67.2	61.6	-5.6
남 20대	26.7	12.5	9.0	13.1	18.7	6.8	8.2	2.9	2.1	57.5	60.8	3.3
남 30대	26.2	10.4	12.4	14.9	13.7	9.6	8.7	2.4	1.6	59.0	63.4	4.4
남 40대	23.0	15.2	18.5	13.4	16.3	5.7	4.7	2.4	0.8	58.2	61.8	3.6
남 50대	22.3	18.7	14.8	11.6	15.6	5.9	6.2	1.7	3.2	59.3	59.0	-0.3
남 60대	24.9	11.2	11.3	13.8	14.5	7.5	6.8	1.7	8.2	60.3	63.9	3.6
남 70세 이상	33.1	6.2	2.8	13.7	12.8	4.7	5.8	5.0	15.9	59.7	60.7	1.0
여 10대	39.7	7.9	9.7	13.5	14.1	4.6	6.1	1.8	2.6	52.8	52.4	-0.4
여 20대	35.4	7.2	3.9	13.3	18.7	7.3	9.9	2.7	1.7	52.6	57.5	4.9
여 30대	33.3	6.4	5.6	11.0	21.3	9.5	8.6	1.8	2.5	62.5	60.3	-2.2
여 40대	24.0	6.3	8.3	9.5	25.5	8.5	11.9	2.0	4.0	62.6	69.8	7.2
여 50대	22.3	7.7	7.8	10.4	25.2	8.6	9.4	2.3	6.3	61.4	70.0	8.6
여 60대	30.5	6.2	6.2	10.1	18.3	9.4	9.4	1.9	8.1	63.0	63.3	0.3
여 70세 이상	35.2	5.6	5.0	6.1	19.7	7.0	5.2	4.1	12.1	51.8	59.2	7.4

<연령대별 생활체육 참여율 및 참여 빈도>

(대상: 응답자 전체, 단위: %, %p)

구분	전혀 안 함	한 달 3번 이하	주 1회	주 2회	주 3회	주 4회	주 5회	주 6회	주 7회	주 1회 이상		차이(%p)
										' 17년	' 18년	
전체	28.0	9.8	9.8	11.8	18.2	7.3	8.1	2.4	4.6	59.2	62.2	3.0
남성	25.5	13.0	12.9	13.0	15.4	6.6	7.2	2.5	3.9	60.1	61.6	1.5
여성	30.5	6.7	6.7	10.5	21.1	8.0	8.9	2.4	5.3	58.4	62.8	4.4
10대	32.9	9.9	12.9	11.9	14.2	4.9	8.7	2.0	2.6	60.4	57.2	-3.2
20대	30.8	10.0	6.6	13.2	18.7	7.0	9.0	2.8	1.9	55.2	59.3	4.1
30대	29.6	8.5	9.2	13.0	17.4	9.6	8.7	2.1	2.0	60.7	61.9	1.2
40대	23.5	10.8	13.5	11.5	20.8	7.0	8.2	2.2	2.4	60.4	65.7	5.3
50대	22.3	13.2	11.3	11.0	20.4	7.2	7.8	2.0	4.8	60.4	64.5	4.1
60대	27.8	8.6	8.7	11.9	16.5	8.5	8.1	1.8	8.1	61.7	63.6	1.9
70세 이상	34.4	5.8	4.1	9.1	16.9	6.1	5.5	4.4	13.6	54.6	59.8	5.2

여성 전반의 생활체육 참여율 증가는 여성들의 ‘운동을 통한 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 증대와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70세 이상의 생활체육 참여율 상승은 생애주기별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에 따른 ‘은퇴기 이후 맞춤형 프로그램’의 보급과 일상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조, 걷기 등 활동 지원에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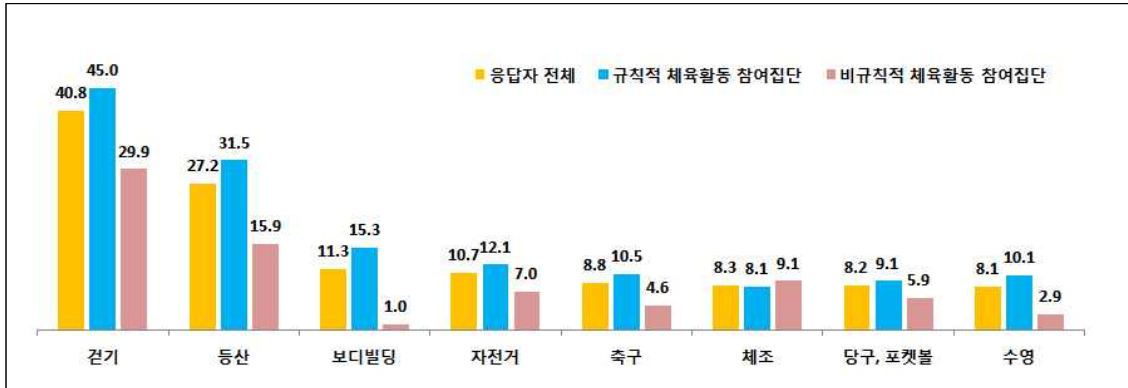
생활체육 경험률, 규칙적 생활체육 참여자의 경험률 증가

전체 응답자 중 최근 1년간 한 번 이상 생활체육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88.1%로 전년 대비 1.5%포인트(p) 증가했다. 경험 종목 수로 보면, 1종목을 경험한 응답자가 39.5%, 2종목을 경험한 응답자가 30.5%로 전년 대비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규칙적 생활체육 참여자는 걷기(45.0%), 등산(31.5%), 보디빌딩(15.3%)뿐만 아니라 자전거(12.1%), 축구(10.5%), 당구·포켓볼(9.1%), 수영(10.1%) 등에 참여하는 등, 생활체육 참여 비율이 높아지는 것과 함께 그 종목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체육시설 확충, 스포츠클럽을 통한 체육활동 프로그램 제공 등의 정책적 성과로 분석된다.

<생활체육 종목별 경험률(복수응답) - 주요 10순위 종목>

(대상: 전체, 규칙적 생활체육 참여자, 비참여자, 단위: %)



주 3회 이상 생활체육 참여자 비율 나이가 많아질수록 증가,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높아

주 3회 이상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율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증가했다. 또한 전체 연령대에서, 여성의 비율(45.6%)이 남성의 비율(35.7%)을 크게 웃돌았다.

주 3회 이상 생활체육 참여자의 경우, 생활체육 참여 목적은 '건강 유지 및 증진'이 46.4%, '체중조절 및 체형관리'가 22.0%로 다른 집단(주 1~2회, 한 달 3회 이하)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참여 시간대로 보면 평일 아침·새벽(6~8시) 또는 저녁 시간(18시 이후)의 참여율이 높았다. 참여 형태로 보면, 혼자서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다른 참여자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생활체육 참여빈도에 따른 체육활동 참여 정도>

(대상: 전체, 단위: %)

구분		전혀 안함	한 달 3번 이하	주 1-2회	주 3회 이상
전 체	전 체	28.0	9.8	21.5	40.6
성별	남성	25.5	13.0	25.9	35.7
	여성	30.5	6.7	17.1	45.6
연령	10대	32.9	9.9	24.8	32.4
	20대	30.8	10.0	19.8	39.5
	30대	29.6	8.5	22.2	39.8
	40대	23.5	10.8	25.1	40.7
	50대	22.3	13.2	22.4	42.1
	60대	27.8	8.6	20.6	43.0
	70세 이상	34.4	5.8	13.3	4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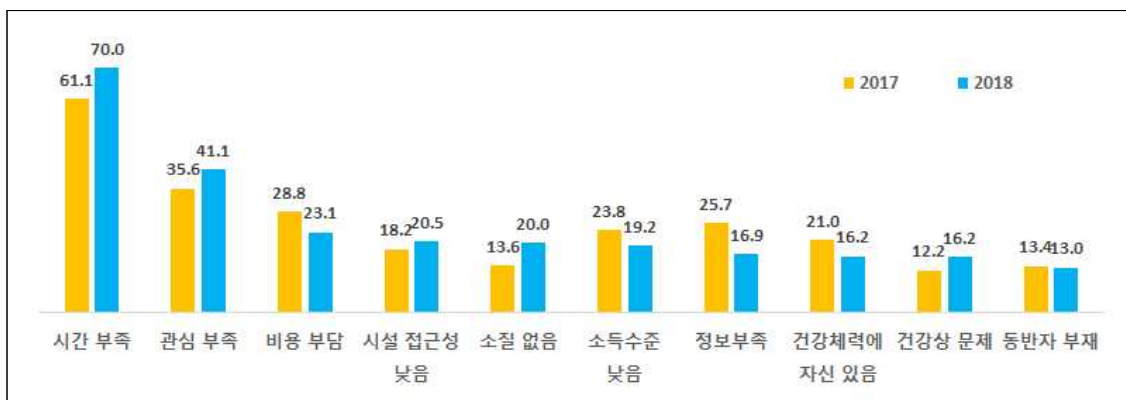
생활체육에 참여하지 않는 주된 원인은 ‘시간 부족’,
 ‘비용’과 ‘정보’, ‘동반자’ 문제로 체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는 줄어

최근 1년간 체육활동에 전혀 참여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11.8%)를 대상으로 해당 원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작년과 대비해 ‘시간 부족’(70%), ‘관심 부족’(41.5%)은 증가하였으나, ‘지출 비용 부담’(23.1%), ‘체육활동 정보 부족’(16.9%), ‘동반 참여자 부재’(13.0%) 등의 원인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과 정보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감소하는 현상은 걷기와 같이 비용이 들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동반자 없이 혼자서 운동을 즐기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는 것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1년간 체육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이유>

(단위:%, 복수응답)



은퇴기 이후 세대의 참여 독려를 위해 참여 빈도에 따른 맞춤형 정책 필요

한편 은퇴기 이후 세대, 특히 70세 이상 ‘매일’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비율은 13.6%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으며,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경우 또한 34.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나 생활체육 참여가 양극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은퇴 이후 세대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에 맞춘 정책과 함께, 규칙적으로 운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규칙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등 맞춤형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19년 60개소, 600억 원)와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19년 80개소, 800억 원) 건립, 지역 스포츠클럽 확대(’18년 76개소 → ’19년 97개소), 생활체육지도자 확대 배치(’18년 2,600명 → ’19년 2,740명)를 통한 종목별 프로그램 보급, 여성 및 노년층 맞춤형 체육활동 지원과 연령대 특성을 반영한 생활체육 진흥 정책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청년창업농 1,600명 모집에 2,981명 지원, 3월까지 심사 후 최종 선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2019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을 마감한 결과, 2,981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 청년농업인들의 창업 초기 생활안정을 위하여 월 최대 100만원을 최장 3년간 지원

^{**} 12월31일부터 1월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 접수

□ 금번 신청자를 대상으로 2월 중 시·군단위 서면평가를 진행하여 시군별 사업대상자의 1.5배수를 선발하고, 3월 중 시·도단위 면접평가를 거쳐 4월에 1,600명을 최종 선발한다.

○ 서면 및 면접평가 과정에서는 신청인들의 영농의지와 목표, 영농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서면 및 면접평가 위원들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농식품부 주관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한다.

□ 금번 신청 결과를 보면, 지역별로는 경북 지역의 신청자가 가장 많았고, 경력별로는 독립경영 예정자가 가장 많았으며, 재춘 청년보다는 귀농(예정자 포함) 청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신청 인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북 552명(18.5%), 전북 447명(15), 전남 442명(14.8), 경남 340명(11.4), 경기 318명(10.7), 충남 281명(9.4), 충북 203명(6.8), 강원 158명(5.3), 제주 97명(3.3)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산·대구·광주 등 특광역시에서도 143명(4.8)이 신청하였다.

○ 영농경력별로는 독립경영 예정자가 1,686명(56.6%), 독립경영 1년차 800명(26.8), 독립경영 2년차 321명(10.8), 독립경영 3년차 174명(5.8) 순으로 나타나 영농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신청이 두드러졌다.

* 독립경영 : 본인 명의로 농지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하여 영농을 수행

* 독립경영 1년차(2018년 경영체 등록자), 2년차(2017년), 3년차(2016년)

○ 또한 도시에서 귀농을 하였거나 귀농 예정인 청년이 2,125명(71.3%)으로 재촌 청년 856명(28.7) 보다 2.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농식품부는 이외에도 신청자들의 영농기반 유무(有無)와, 농업계 학교 졸업여부 등도 분석하였다.

○ 농촌에 부모의 영농기반이 있는 청년들의 신청이 많았으며(2,057, 69%), 기반이 전혀 없는 청년도 927명(31) 신청하였다.

○ 비농업계 졸업생(금년도 졸업예정자 포함)이 2,241명(75.2%)으로

농업계 학교 졸업생(740명) 보다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밖에도 부부공동 창업자(예정자 포함)는 476명(16%), 농업법인 공동 창업자(예정자 포함)는 59명(2)으로 나타났다.

□ 최종 선발된 청년창업농 1,600명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청년농의 희망에 따라 창업자금, 농지, 기술 교육 등을 연계지원 할 예정이다.

○ 청년농 사업 지원자가 사전적으로 신청한 연계사업은 창업자금 1,846명(61.9%), 농지은행 매입·임차 1,335명(44.8), 선도농가 실습 지원 629명(21.1), 농업법인 인턴사업 318명(10.7%) 순으로 나타났다.

□ 향후 농식품부는 최종 선발자 대상으로 '19년 4월 중에 지원기관* 합동으로 권역별로 지원금 사용범위, 의무사항 등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선발자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연계사업을 최종 확정하여 청년 창업농들이 농업·농촌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및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등

참고

'19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현황

□ 시도별 신청 현황

(단위: 명, %)

구분	광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신청 (비율)	143 (4.8)	318 (10.7)	158 (5.3)	203 (6.8)	281 (9.4)	447 (15)	442 (14.8)	552 (18.5)	340 (11.4)	97 (3.3)	2,981 (100)

□ 영농경력 등 특성별 구분

(단위: 명, %)

구분			예정자	1년차	2년차	3년차	합계
영농경력별			1,686(56.6)	800(26.8)	321(10.8)	174(5.8)	2,981(100)
성별	남성		1,331	672	270	156	2,429(81.5)
	여성		355	128	51	18	552(18.5)
계열	비농업계 졸업		1,255	606	250	130	2,241(75.2)
	농업계졸업		431	194	71	44	740(24.8)
귀농 여부	귀농		1,155	610	237	123	2,125(71.3)
	재촌		531	190	84	51	856(28.7)
영농 기반 마련	증여 상속	전체	66	37	21	20	144(4.8)
		일부	280	113	33	6	432(14.5)
	부모와는 별도		808	397	183	90	1,478(49.6)
	부모기반 없음		532	253	84	58	927(31.1)
협업 경영	부부공동		226	144	73	33	476(16.0)
	법인공동		33	9	9	8	59(2.0)

□ 농지 등 관련 지원사업 신청 현황

구분	예정자	1년차	2년차	3년차	합계
후계농육성자금	1,165	413	171	97	1,846
농지 임차·매입	796	330	135	74	1,335
선도농가 실습	629	—	—	—	629
농업법인 실습	318	—	—	—	318
실습 중복 신청	280	—	—	—	280

미세먼지법 시행 이후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 미세먼지법 시행으로 전국 발령요건 일원화, 울산·경남·경북·강원(영서) 사상 첫 발령 -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월 21일(목요일) 17시 기준으로 다음날 발령 기준을 충족하여,
 - 2월 22일(금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내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지난 1월 13~15일 전국적인 비상저감조치 발령 이후 올해 4번째다.
-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시행(‘19.2.15) 이후 처음으로 발령되는 것이며, 법령의 규정에 따라 통일된 발령 기준이 적용되고 보다 강화된 조치가 시행된다.
- 우선, ‘미세먼지법’ 시행으로 기존 시도마다 달랐던 발령기준도 3가지 요건으로 일원화되었으며, 하나의 요건 이상이 충족되는 시도에 내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이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

- ① 당일 0~16시 평균 $50\mu\text{g}/\text{m}^3$ 초과 및 내일 $50\mu\text{g}/\text{m}^3$ 초과 예상(기존 수도권 발령기준)
-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mu\text{g}/\text{m}^3$ 초과 예상
- ③ 내일 $75\mu\text{g}/\text{m}^3$ 초과(매우나쁨) 예상

- 특히, 기존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던 울산·경남·경북·강원(영서)에서도 사상 최초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 아울러, ‘미세먼지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도에 종전보다 강한 조치가 시행된다.

○ 먼저, 서울지역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 기존에는 연식에 따라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었으나, 자동차의 배출가스 수준에 따른 등급제를 적용하여 운행에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 시행되는 것이다.

※ 5등급 운행제한은 2부제와 비교하여 대상차량은 1/3 수준이나 감축 효과는 3배

- 서울 전지역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콜센터(1833-7435)와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다음으로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공사장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등 민간부문의 비상저감조치 참여도 확대된다.

-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지난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도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자체적인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 이들 민간사업장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80%를 배출

□ 또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 받는다.

* 2월 22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

○ 특히,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2.22(금) 06시~21시) 동안에는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강화된다.

○ 각 시도도 자체적인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며,

○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드론감시팀을 활용하여 사업장에 대한 입체적 단속을 실시한다.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석탄·중유 발전기 총 29기(인천 2기, 경기 4기, 충남 18기, 울산 3기, 전남 2기)가 내일 6시부터 21시까지 출력을 제한하여 초미세먼지 약 5.32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실제 상한제약 적용여부는 당일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상한제약 시행 대상 발전기(29기) >

지 역	발 전 기	연 료	출력 감발량	초미세먼지 감축량
인천	영흥 1·2	석탄	32만kW	0.45톤
경기	평택 1·2·3·4	중유	28만kW	0.52톤
충남	태안 4·5·6·8, 보령 1·2·4·5·6, 당진 1·2·3·4·5·6·10, 신보령1·2	석탄	209만kW	3.2톤
울산	울산 4·5·6	중유	24만kW	0.66톤
전남	호남 1·2	석탄	10만kW	0.49톤
합계			303만kW	5.32톤

□ 환경부는 미세먼지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의 참여범위가 확대되고, 사상 최초로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력할 계획이며,

○ 비상저감조치 시행 이후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하여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행동요령. 끝.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행/동/요/령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하기



2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KF99)의 올바른 사용법)



3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온몸을 구석구석 씻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6

환기, 실내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 실내·외 공기 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하기
- 실내 물결레질 등 물청소 실시, 공기청정기 가동하기(공기청정기 필터 주기적 점검·교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크게 확대

- 적합직무를 '18년 74개 직무에서 '19년 213개 직무로 확대 -

- 올해부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의 지원 규모 및 대상 직무가 크게 늘어난다.
 - 고용노동부는 신중년 적합직무를 지금까지는 「한국고용직업분류」의 74개 직무(세분류 4자리 기준)로 정하였으나, 올해에는 기업체 인사담당자 등의 의견과 전문가의 노동시장 분석결과 등을 바탕으로 213개 직무로 늘렸다.
 - 이에 따라, 신중년의 고용 확대가 기대되는 인사노무전문가, 총무사무원, 인문사회·자연과학 연구원,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 여행 안내원, 문라 기술예능 강사, 금속 공작기계 조작원, 운송장비 조립원 및 정비원 등이 신중년 적합직무로 추가되었고, 일부 신직업(연구실안전전문가, 빌딩 정보모델링(BIM)전문가 등)도 포함되었다.
 - 지원 예산도 '18년 86억 원에서 273억 원으로 늘어나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신중년이 자신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직업에 보다 빨리 재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은 신중년의 경력 및 전문성을 활용해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를 찾아내고 지원함으로써 신중년들이 좋은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58~'63년생)의 대량 퇴직이 이루어지고, 그동안 지속해서 증가하던 신중년의 고용률이 '18년을 기점으로 하락하는 등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반영하여 사업이 크게 확대되었다.
- 신중년 적합직무는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 ▲앞으로 새로운 일자리 수요가 예상되는 분야에서 신중년이 도전할 수 있는 직무, ▲직업훈련 등을 받아 신중년이 다시 진입하기 쉬운 직무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선정된다.

<확대된 주요 적합직무(세부직업)>

직무분야	세부직업
경영/사무	인사·노무 전문가, 총무 사무원, 법률 사무원 등
정보통신/방송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및 연구원, 웹 운영자, 정보보안 전문가, 컴퓨터 설치·수리원 등
의료/보건 (단순직 제외)	간호사, 영양사, 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사회복지/교육	강사(문리·어학, 기술·기능계 등) 등
영업/서비스/음식 (단순직 제외)	결혼상담원 및 웨딩플레너, 여행 안내원 및 해설사 조리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등
공학	금속 재료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금속 재료공학 시험원, 화학공학 시험원 등
기계/금속 (단순직 제외)	승강기 설치·정비원, 건설·광업 기계 설치·정비원, 금속 공작기계 조작용, 자동차 조립원 등

- ☐ 「신중년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할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80만 원, 중견기업은

월 4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단, 만 55세 이상 고령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지원

**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 이하인 기업(제조업 500명, 광업·건설업 등 300명, 도매 및 소매업 등 200명, 그 밖의 업종 100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업주는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중년 구직자를 채용하기 전 고용센터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고, 고용센터의 승인 후 신중년을 고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사업 참여 신청은 사업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으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신청서류 서식 및 기타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송홍석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사업」의 확대로 신중년들이 경험과 전문성을 살리며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꾸준히 역량을 발휘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라고 하면서,

○ “지속적으로 신중년들의 요구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더욱 현실에 맞는 사업으로 가꾸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붙임 1.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금」 개요

2. 신중년 적합직무 현황

□ 사업개요

-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

□ 사업내용

- (사업규모) 5,000명 규모(273억)
- (지원대상)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 (지원수준)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 중견기업 40만원(최대 1년)
 - (지원한도) 사업장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 지원요건
 - (채용요건) 정규직 채용(무기계약직), 월 60시간 이상 근로
 - * 단, 만 55세 이상 고령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원
 - (고용유지)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금 지급
- (지원절차)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 고용센터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심사위원회」를 거쳐 만 50세 이상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지원금 신청

□ 적합직무 선정기준

- 신중년의 경력 및 특성 등을 감안했을 때 다른 세대에 비해 신중년의 업무 수행이 더 적합한 직무
- 정보통신발달·고령화 등으로 인해 향후 새로운 일자리 수요가 예상되는 분야에서 도전할 수 있는 직무
- 기업의 인력수요가 증가하는 직무 중 직업훈련 등을 통해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기 용이한 직무
 - * 단, 단순직/보조직은 제외

강원남부지역,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강원남부해바라기센터,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신규 개소 -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2월 21일(목) 오후 3시 세브란스기독병원(강원도 원주시)에서 관련 인사 및 강원도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남부해바라기센터(통합형)’ 개소식을 개최한다.
- 이번 개소로 강원 남부지역(횡성, 영월, 평창, 정선) 거주 주민들이 성폭력·가정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수사·법률·의료 지원 등 회복까지 한층 가까운 시설에서 더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강원남부해바라기센터는 ‘통합형’ 센터로, 응급의료·수사·초기상황 대응 중심의 ‘위기지원형’과 달리 응급의료, 수사·법률, 상담 뿐 아니라 장기적인 심리치료까지도 365일 24시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측은 센터 설치를 위해 병원 내 362.2㎡의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여성가족부와 강원도는 개설에 소요되는 비용 7억 원(여가부 3.5억 원, 강원도 3.5억 원)을 지원했다.
- 센터 내에는 피해자가 분리된 공간에서 편안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담실·피해자 안정실·진술녹화실·보호자대기실·진료실·놀이치료실 등이 설치되고, 여성경찰관, 상담원, 간호사 등 전문인력도 배치된다.

《 해 바 라 기 센 터 》

- ◆ 목적: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통합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 피해를 방지
- ◆ 주요 내용: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수사 및 법률 지원
 - (상담지원)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운영, 유관기관과 연계
 - (의료지원) 성폭력 응급키트 조치, 응급치료, 피해자 진료 및 진단서 발급
 - (수사·법률지원) 수사 및 소송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피해자 진술서 작성, 진술녹화, 무료법률지원 연계 등
 - (심리치료지원)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 피해 아동에 대한 장기 심리치료 지원
- ◆ 현황: 전국 총 39개소 운영 (위기지원형·아동형·통합형) ('19년. 2월 기준, 신규개소 포함)

- 한편, 지난해 해바라기센터를 이용한 폭력 피해자는 2만 7천여 명이며, 의료·심리·상담·수사 및 법률 등 전체 39만 8천여 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 여성가족부는 성폭력피해자를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지역번호+1366)’을 비롯해 전국 지역별 해바라기센터, 성폭력피해 상담소 운영·지원을 통해, 신고, 초기상담 단계부터 수사·법률 지원·의료 등 피해자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 또한, 피해 신고 후 소송 과정 중에 겪게 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형사 소송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민사·가사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도 변호인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진선미 여성가족부장은 “이번 통합형 해바라기센터 설치로 강원 남부지역 피해자들을 위한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고,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의 신속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하고,

- “성폭력 피해자가 하루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강원남부해바라기센터 개소식 개요

2. 강원남부해바라기센터 현황

3. 강원남부해바라기센터 조감도

4. 해바라기센터 사업개요

5. 해바라기센터 전국 현황

□ 개 요

- (일 시) 2019. 2. 21(목) 15:00~16:10
- (장 소)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루가홀
- (참석자) 여성가족부 장관, 강원지방경찰청장, 원주시장, 송기현 국회의원, 김기선 국회의원, 심기준 국회의원,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지역유관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 200여명
- (내 용) 기념식, 원내·외 해바라기센터 시설 라운딩

시 간		내 용	비고
15:00~15:01	1'	○ 개 회	루가홀
15:01~15:04	3'	○ 국민의례	
15:04~15:06	2'	○ 내빈소개	
15:06~15:08	2'	○ 경과보고	
15:08~15:12	4'	○ 환영사(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	
15:12~15:27	15'	○ 기념사 (여성가족부장관, 강원지방경찰청장, 원주시장,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	루가홀 입구
15:27~15:30	3'	○ 축사(국회의원 송기현, 김기선, 심기준)	
15:30~15:45	15'	○ 기념촬영, 테이프 컷팅	문창모 기념관 3층 (도보 5분)
15:45~15:55	10'	○ 현판제막식	
15:55~16:10	15'	○ 해바라기센터 시설 라운딩 및 다과	
16:30		○ 귀 청	

□ 사업개요

- 사 업 비 : 691,524천 원(국비 345,762, 도비 345,762)
- 설치과정
 - 해바라기센터 선정통보(여성가족부) : '18. 5. 28.
 - 해바라기센터 개소 '18. 12. 31.
- 시행주체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운영체계 : 강원도(예산지원, 지도감독), 강원도경찰청(경찰파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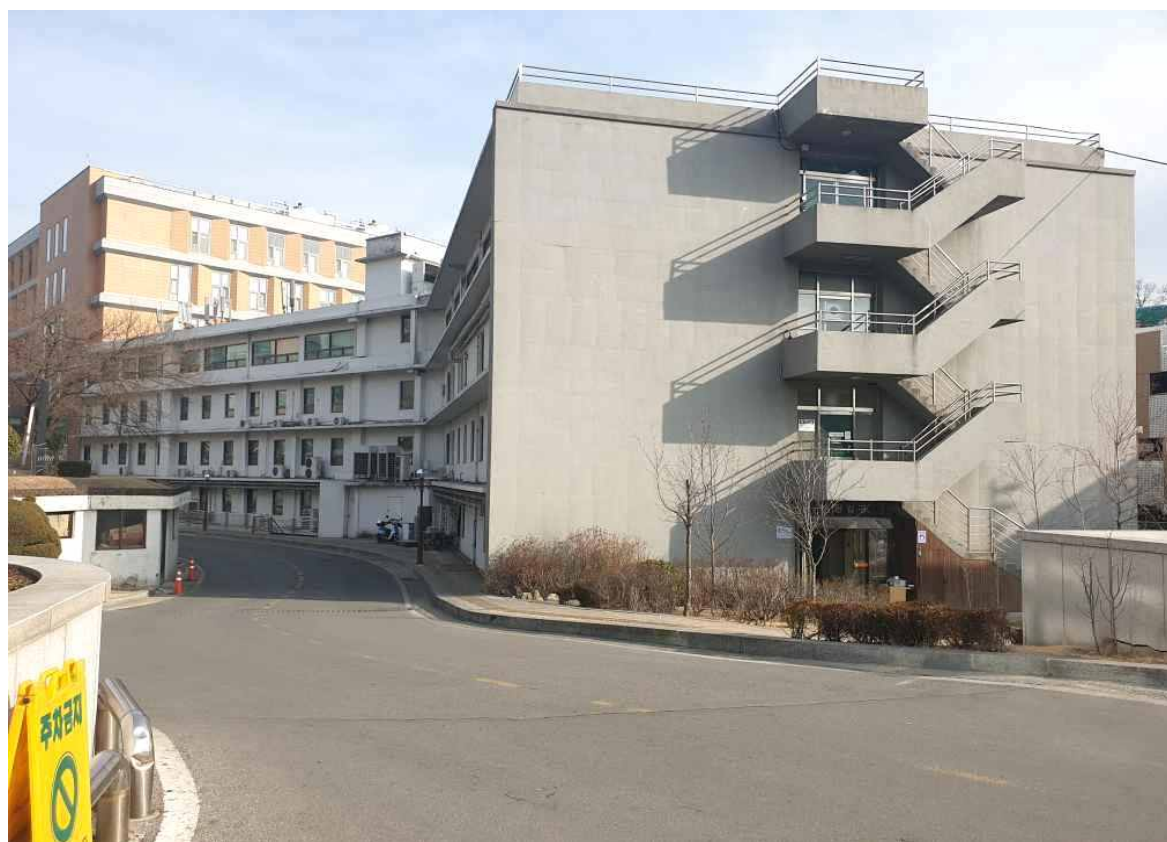
□ 통합형 설치현황(신규)

구 분	개요	원내	
시 설	총면적 362.2m ²	샤워실 1개, 진료실 2실, 진술녹화실 1실, 심리평가실 1실, 심리치료실 1개, 상담실 1개, 보호자대기실 1개, 사무실 1실, 탕비실 1개, 회의실 1개, 보호자대기실 1실(총12실)(면적 362.2m ²)	
장 비		산부인과 의료장비 비치 완료	상담치료 검사장비 및 비품구입예정
인 력	13명	•비상근 : 2명(센터장 1, 소장 1) •상 근 : 11명(부소장 1, 간호사 2, 임상심리사 1 상담사 4, 심리치료사 2, 행정원 1)	

□ 설치현황(강원도)

시 설 명	부소장	신 고 년월일	소 재 지 (전화번호)	예산지원액 (천원)	종사 자수	시설 규모 (m ²)	운 영 주 체	
							법 인 명 (설립일자)	대표자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 (통합형)	서정현	12.12.12	춘천시 백령로 156 (252-1375)	계 : 585,571 국비 : 409,900 도비 : 175,671	12	88	강원대학교 병원	이승준
강원동부해바라기센터 (통합형)	이화자	10. 9. 8	강릉시 강릉대로 419번길 42 (652-9839)	계 : 615,186 국비 : 430,630 도비 : 184,556	11	110	강릉동인 병원	한현복

원주시 일산로 20,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문창모기념관 5층(여의사 당직실 리모델링 후 이용)



□ **추진개요**

- (목적)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의료, 수사, 상담, 법률지원을 통합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 피해를 방지
- (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연혁) 서울 해바라기아동센터 개소('04.6월), 서울 경찰병원 내 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를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서울 원스톱지원센터」로 전환 개소('05.8월)
 -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신규 설치(34개, ~'14)
 - 3개 센터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일원화('15.1)

□ **주요내용**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의료, 수사, 상담, 법률지원

- (의료지원) 성폭력 응급키트 조치, 응급치료, 피해자 진료 및 진단서 발급
- (상담지원)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운영, 유관기관과의 연계
- (수사·법률지원) 수사 및 소송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피해자 진술서 작성, 진술녹화 실시, 무료법률지원 연계 등
- (심리치료지원)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 피해 아동에 대한 장기 심리치료 지원

※ 심리치료는 '아동형' 및 '통합형' 해바라기센터만 지원

붙임 5
해바라기센터 현황(39개소)

시도	명칭	운영기관	개소일	유형	소재지
서울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경찰병원	'05. 8.31.	위기지원	서울 송파구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보라매병원	'08.12. 3.	위기지원	서울 동작구
	서울해바라기센터	서울대병원	'11. 2.16.	통합	서울 종로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연세의료원	'04. 6.18.	아동	서울 마포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	삼육서울병원	'15.11.11.	통합	서울 동대문구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국립중앙의료원	'16.12.13.	통합	서울 중구
부산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	부산의료원	'13. 9. 6.	위기지원	부산 연제구
	부산해바라기센터	부산대병원	'16. 1.25.	통합	부산
대구	대구해바라기센터	대구의료원	'06. 5. 9.	위기지원	대구 서구
	대구해바라기센터(아동)	경북대병원	'05. 6. 9.	아동	대구 중구
인천	인천동부해바라기센터	인천의료원	'06. 3.31.	위기지원	인천 동구
	인천북부해바라기센터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13. 5. 9.	위기지원	인천 부평구
	인천해바라기센터(아동)	가천대길병원	'09. 7.17.	아동	인천 남동
광주	광주해바라기센터	조선대병원	'06. 9. 4.	위기지원	광주 동구
	광주해바라기센터(아동)	전남대병원	'05. 6.29.	아동	광주 동구
대전	대전해바라기센터	충남대병원	'14.12. 1.	통합	대전 중구
울산	울산해바라기센터	울산병원	'11.12. 1.	통합	울산 남구
경기	경기북동부해바라기센터	의정부의료원	'07. 9.18.	위기지원	경기 의정부
	경기서부해바라기센터	한도병원	'13. 7.24.	위기지원	경기 안산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거점)	아주대병원	'14.11.19.	통합	경기 수원
	경기북서부해바라기센터	명지병원	'14.12.26.	통합	경기 고양
	경기해바라기센터(아동)	분당차병원	'08.12.26.	아동	경기 성남
강원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	강원대병원	'12.12.12.	통합	강원 춘천
	강원동부해바라기센터	강릉동인병원	'10. 9. 8.	통합	강원 강릉
	강원남부해바라기센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18.12.31	통합	강원 원주
충북	충북해바라기센터	청주의료원	'06. 2. 8.	위기지원	청주 흥덕구
	충북해바라기센터(아동)	건국대충주병원	'09. 7.22.	아동	충북 충주
충남	충남해바라기센터	단국대병원	'10. 1.13.	위기지원	충남 천안
전북	전북해바라기센터	전북대병원	'06. 2. 1.	위기지원	전주 덕진구
	전북서부해바라기센터	원광대병원	'17.12.20	통합	전북 익산
	전북해바라기센터(아동)	전북대병원	'09. 7. 6.	아동	전북 전주
전남	전남동부해바라기센터	성가롤로병원	'10. 1.28.	위기지원	전남 순천
	전남서부해바라기센터	목포중앙병원	'10. 9.29.	통합	전남 목포
경북	경북북부해바라기센터	안동의료원	'06. 1.12.	위기지원	경북 안동
	경북동부해바라기센터	포항성모병원	'16. 1. 1.	통합	경북 포항
	경북서부해바라기센터	김천제일병원	'15.12. 1.	위기지원	경북 김천
경남	경남서부해바라기센터	경상대병원	'09. 8. 7.	통합	경남 진주
	경남해바라기센터	마산의료원	'06.12. 1.	위기지원	경남 마산
제주	제주해바라기센터	한라병원	'15. 1.28.	통합	제주 제주시

냉·난방비 걱정 없는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298호 입주 개시

- 단독주택·아파트 장점 누리며 에너지는 60% 절감...임대료는 주변 시세 67%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냉난방비, 미세먼지 걱정 없는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세종·김포·오산 3개단지, 총 298세대) 준공식을 이달 18일 세종시 로렌하우스에서 개최한다.

< 임대형 단독주택 단지 조감도(세종·오산·김포 298세대) >



- 로렌하우스*는 다양한 유형(저층·고층·단지형)의 제로에너지건축 성공 사례 발굴을 통해 공공·민간으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저층형 시범사업으로

* ROREN HOUSE는 zeRO energy + RENTal HOUSE의 합성어로 에너지 사용량이 제로에 가까운 임대형 주거공간을 의미한다.

- 2016년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참여자 공모를 통해 리츠(REITs)를 설립*하고 영업인가를 득한 자산관리 회사(AMC)가 건설한 국내 최초 「임대형 제로에너지 주택단지」이다.

* (주)패시브하우스순환형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이번 사업은 단독주택과 제로에너지건축의 장점을 결합시킨 것이 특징으로 새로운 유형의 주거복지를 제공하고, 냉난방비 등 에너지비용 감소를 통한 주거비 경감,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으로 건강한 주거생활 등 거주자의 삶의 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제로에너지건축 요소기술 적용을 통해 동일규모 아파트 대비 에너지절감률은 약 60% 수준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이 저렴한 비용으로도 가능해진다.

- 단열성능을 극대화하는 '패시브 요소'로 외벽단열, 열교 차단, 고성능 3중 창호, 고기밀 시공 등을 적용하였으며,

- 특히, 바닥·지붕 등 주택 외벽 전체를 꿰뚫지 않고 감싸는 '외단열 공법'과 '열교 차단 공법'을 적용하여 외벽과 내벽 단열재 사이의 온도차에 의한 결로와 이로 인한 곰팡이의 발생을 원천 차단하여 주거 공간의 쾌적성을 극대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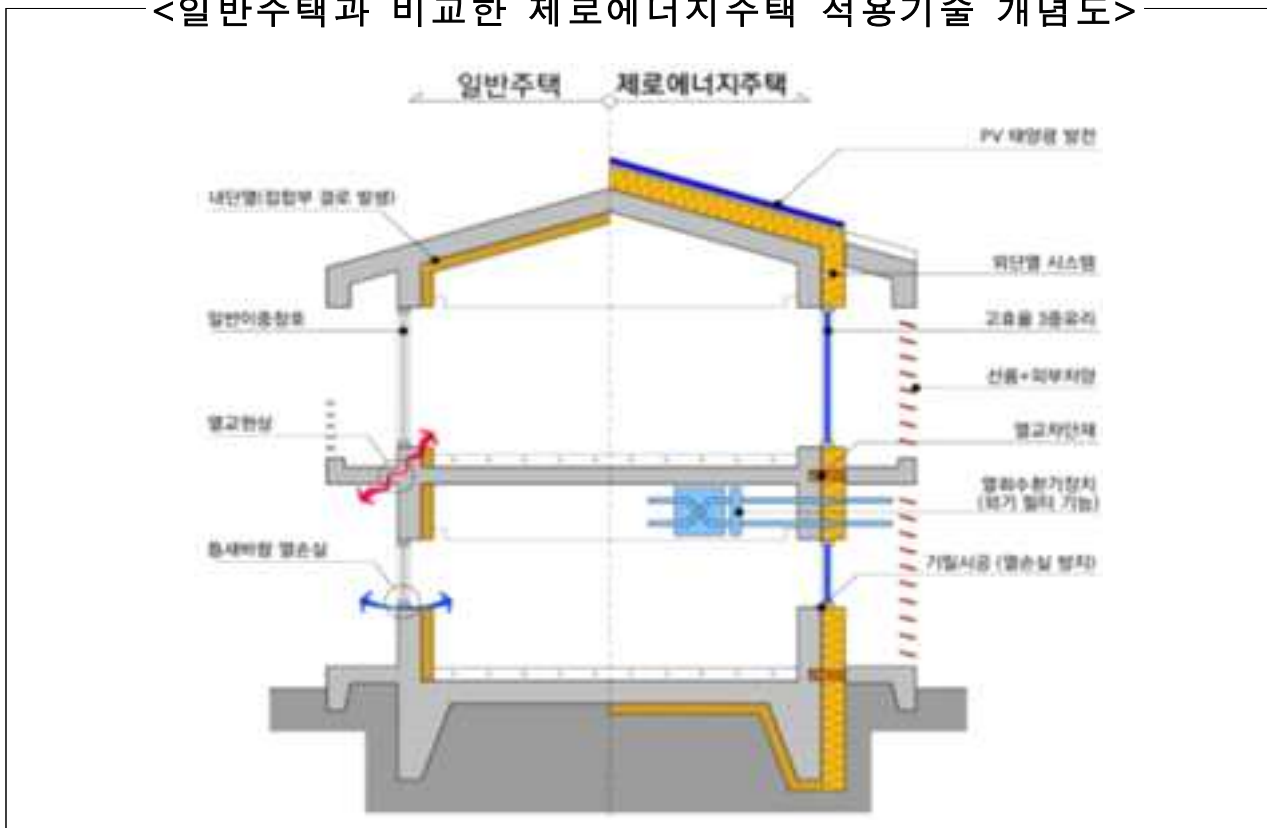
- 고효율 설비시스템 등의 '액티브 요소'로 열회수 환기장치, 태양광 패널 등을 적용하였으며,

- 특히, 환기를 통해 발생하는 열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미세먼지를 필터로 걸러주는 '열회수 환기장치'를 적용하여 쾌적한 실내공기를

24시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모든 주택은 아이들의 작은 놀이터로 활용가능한 마당이 있고 맘 놓고 뛰어 놀아도 층간소음이 없어 최적의 육아환경이 보장된다. 또한, 전문 임대관리사업자를 통해 시설관리, 보안·방범 서비스 등 아파트형 임대관리시스템을 통해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게 된다.

<일반주택과 비교한 제로에너지주택 적용기술 개념도>



- 단독주택을 직접 건축하거나 구입할 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면서 수요자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성능 단독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주변 임대료 시세의 67% 수준으로 공급하였으며,

○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을 더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약 480호 규모(동탄2신도시, 세종, 부산)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김태오 과장은 “이번에 입주한 임대형 제로
에너지 단독주택은 주택도시보증에서 단독주택 임대리츠에 출자한
최초 사례이자 제로에너지 기술이 임대형 단독주택에 적용되어 대
규모로 보급되는 첫 사례”라며

○ “고층형 아파트 등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이 보급·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 행정중심복합도시 1-1 생활권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B12-1,2
- 대지면적 : 18,217㎡, 건축연면적 : 5,263.17㎡

- 사업자 : (주)패시브하우스임대주택리츠
- 자산관리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사업내용
 - 주택유형 : 단독주택, 호수 : 60호
 - 호당 평균 건축개요 (㎡)

공급 (실내)	전용	서비스				전용 개별필지			비고
		계	발코니	다락	테라스	계	건축	마당	
146.8 (44py)	85	95	34	27	34	178 (54py)	66	112 (31py)	2층 +다락

- 주택성능 (예정)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1+++, 제로에너지 2등급
 - 패시브하우스 인증(2.5~4.5L)
- 추진일정 : 준공('19.1)



나. 김포한강 신도시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R3-4,5,6
- 대지면적 : 17,279.00㎡, 건축연면적 : 11,599.46㎡

- 사업자 : (주)패시브하우스임대주택리츠
- 자산관리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사업내용
 - 주택유형 : 단독주택(합벽형), 호수 : 120호
 - 호당 평균 건축개요 (㎡)

공급 (실내)	전용	서비스				전용 개별필지			비고
		계	발코니	다락	테라스	계	건축	마당	
114 (34.5py)	85	95	8	21	25	96 (29py)	48	48 (15py)	2층 +다락
136.5 (41.3py)	85	70	33	19	28	94 (28py)	47	47 (15py)	2층+ 다락 +지하

- 주택성능(예정)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1++, 제로에너지 5등급
 - 패시브하우스 인증(3.5~4.5L)
- 추진일정 : 준공('19.1)



다. 오산세교지구

- 위치 : 경기도 오산시 금암동 542-2 등 59필지
- 대지면적 : 13,535.9㎡, 건축연면적 : 9,345.6㎡

- 사업자 : (주)패시브하우스임대주택리츠
- 자산관리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사업내용
 - 주택유형 : 단독주택(합벽형), 호수 : 118호
 - 호당 평균 건축개요 (㎡)

공급 (실내)	전용	서비스				전용 개별필지			비고
		계	발코니	다락	테라스	계	건축	마당	
106.3 (32.2py)	79	47	7	20	20	117 (36py)	36	81 (24py)	2층+ 다락

- 주택성능(예정)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1++, 제로에너지 5등급
 - 패시브하우스 인증(3.5~4.5L)
- 추진일정 : 준공('19.2)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만드는 어촌뉴딜 300

- 해수부, 3월부터 「어촌뉴딜 300사업 자문단」 본격 가동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어촌뉴딜 300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게 될 자문단을 구성하고, 21일(목)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중연회장에서 발대식 및 워크숍을 진행한다.

어촌뉴딜 300사업 자문단은 권역별 총괄 조정가와 내·외부 전문가 등 총 135명으로 구성되며, 사업 간 균형과 책임감 있는 사업관리를 위해 8대 권역(경기·인천, 충남, 경남, 강원·경북, 전남 동부, 전남 서부, 전북, 부산·울산·제주)으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8명의 총괄 조정가는 담당 권역별로 차별화되고 체계적인 사업목표와 실현 방안을 도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특화사업 발굴과 문제점 해결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외부 자문위원 105명은 △수산·어촌, 지역경제·경영 △문화관광·레저 △건축·디자인·경관 △도시계획·토목기술 △공동체·지역콘텐츠 등 5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외부위원은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사업계획 수립, 대상지별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지역협의체 활동 지원, 주민역량 강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내부 자문위원 22명은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의 관련 업무 담당자로 구성되며, 인·허가 등 행정 자문과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애로사항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해소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문단은 4명(외부위원 3명, 내부위원 1명)을 한 팀으로 구성하고 팀당 2개소를 맡아 2019년도 사업대상지 70개소에 35개 팀이 투입된다. 자문단은 지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사업대상지별로 전담 배치되며, 자문실명제를 도입하여 자문의 내실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3월부터 4월까지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1차 현장자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의 다른 개발사업과는 달리 어촌뉴딜 300사업 자문단은 사업기간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3년간 현장밀착형 자문을 실시하여 자생력 있는 어촌 구현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발대식에서 “어촌뉴딜 300사업 자문단은 지역주민과의 상생·화합·협력을 원칙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어촌뉴딜 300사업의 내실화와 성공적인 어촌어항 재생기반 구축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

<어촌뉴딜 300사업 자문단 워크숍 개요>

- 일시: 2. 21.(목) 13:30~
- 장소: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중연회장 4층

◆ 계획·시공·사후관리 이르는 전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자문단을 전담배치(팀별 4명)하고 '자문실명제' 도입

□ 자문단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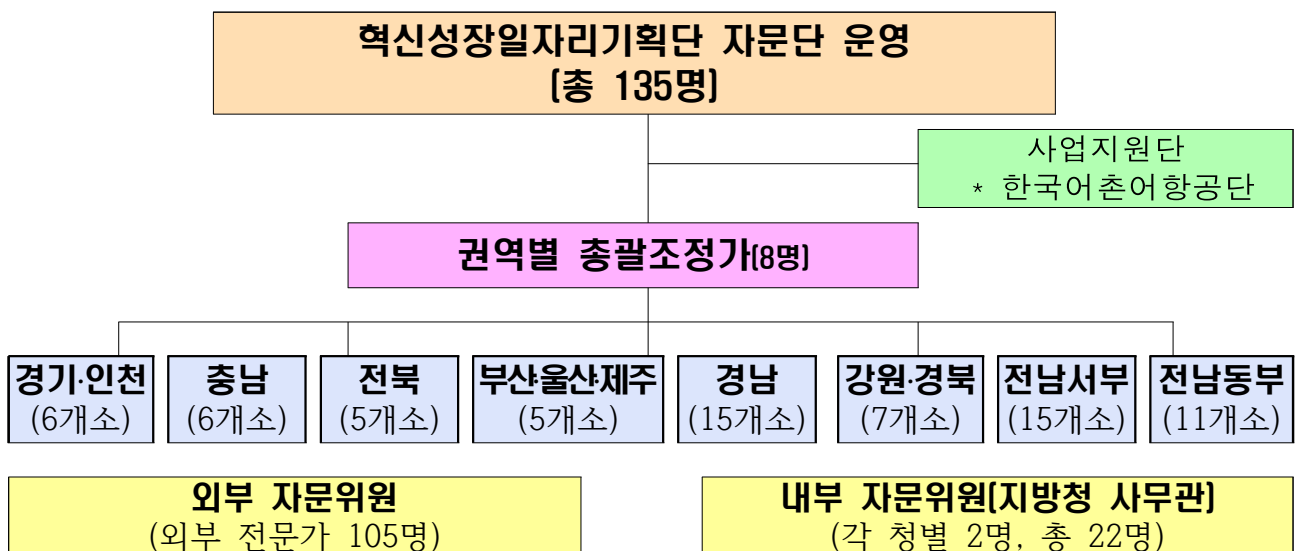
○ 어촌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어촌재생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문가 자문단 운영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지역별 전담배치, 사업기간 종료 후 3년간 정기적인 자문

○ 외부 전문가의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 사업계획 수립지원, 시공단계에서의 사업 진행 방향에 대한 상시 지원

□ 어촌뉴딜 300 자문단 조직도

○ 외부전문가, 내부지원단(지방해양수산청)을 포함하여 약 135명



* 전남 동부(여수청 관할) : 여수, 광양, 순천, 보성, 장흥, 고흥

* 전남 서부(목포청 관할) : 강진, 완도, 진도, 무안, 신안, 영광, 함평, 해남

① 권역별 총괄 조정가

○ (인원) 관련 전문가 8명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디자인, 건축, 지역개발 등)를 ‘권역별* 총괄 조정가’로 위촉하여 사업간 균형과 책임감 있는 사업관리 추진

* (8대 권역) 경기인천, 충남, 경남, 강원경북, 전남동부, 전남서부, 전북, 부산·울산·제주

○ (기능) 어촌뉴딜 300사업의 운영, 평가, 문제점 해결안 제시 총괄

- 담당 권역의 일관적인 사업 목표 실현 방안 도출
- 대상지별 전문가 자문단 의견 조정·협의·절충
- 지역 현안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공간 환경 솔루션 제공

② 외부 자문위원

○ (인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5명

* ①수산업어촌, 지역경제·경영, ②문화관광·레저, ③건축·디자인·경관, ④도시 계획·토목기술 ⑤ 공동체·지역콘텐츠 5개 분야

○ (기능)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계획 수립 자문, 대상지별 사업계획 검토 의견 작성, 지역협의체와 주민의 역량 강화 유도

③ 내부 자문위원

○ (인원) 지방해양수산청 22명(각 청별 2명)

- (기능) 대상지별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관련 인·허가에 대한 자문, 사업 추진 상 문제점 등을 사전 자문 및 해소 지원

④ 자문단 구성 : 총 35개 팀(팀당 2개 사업 담당)

- (구 성) 팀당 4명(외부 3명, 내부 1명)을 기준으로 하되 자율적 의견 제시를 위해 팀장 등의 별도 직위 등은 부여하지 않음

- 내부자문위원(각 지방청)은 관할 구역* 내 사업대상지 위원으로 참여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구역

⑤ 자문단 운영

- (자문기간) ‘자문단’ 과 ‘권역별 총괄 조정가’의 임기는 사업기간 +3년을 원칙

- 어촌뉴딜사업의 결과물이 지역민에게 체화되어 지역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사업기간 종료 후에도 3년간 전문가 자문단 운영

- (역할) 지자체에서 제출한 시행계획(기본+실시설계)의 승인 자문, 개발 여건과 실제 설계·시공 상의 미비점을 발굴 보완

- 내부 자문위원은 사업내용에 대한 자문보다는 지원*을 위주로 활동

* 각종 인·허가에 대한 지원, 민원 대응방안 공동 모색, 현안사항 해결

- (교육) 연 2회(상·하반기)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자문 역량* 향상

⑥ 2019년도 사업대상지 자문 계획 및 일정

- 연 2회(설계·시공 단계) 이상 사업대상지 방문 및 수시협의를 통해 지역

협의체 및 설계·시공사 등에 현장밀착 자문

* 자문단은 일방적 자문을 지양하고 지역주민과 화합·협력·상생을 원칙

〈2019년도 어촌뉴딜 자문단 일정(안)〉

구분	시기	자문내용
사업계획 전 (실시설계 전)	‘19.3~4월	지역여건 분석, 사업계획 구상 방안 검토
사업계획 중 (실시설계 중)	‘19.6~7월	설계완료 전 사업계획에 대한 최종 검토
사업계획 승인 (사업착수 전)	‘19.하반기	제출된 사업계획의 보완사항 발굴 등
수시	연중	지역협의체에 요청에 따라 상시 자문 및 추진사항 점검·피드백